

# 광주·전남교육청 통합 공청회에 “현 교육감 선거용” 비판

## 경쟁 후보자·교육시민단체 비판 성명... 교육청 “시·도민 의견 수렴하는 행사”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과 일반 시·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통합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현직 교육감의 지방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통합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8일 광주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진행한 1차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시·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에 앞서 교직원과 시·도민의 공감을 해소하고 향후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에 담아야 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지방선거 후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사 명분은 공청회이지만 양 교육감이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방정식의 질문에 답변하며 선거 토론회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장관호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교육통합 공청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직 교육감 재선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오후 광주시민협치진흥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왼쪽)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육청

장 정 지부장은 “공청회는 교육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교육 주체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그러나 현장은 특정 인사 배제, 교육청 직원 참석 등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보도 자료를 내고 “교육공동체 공청회가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정치 홍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육행정 통합과 민심 청취를 명

분으로 광주교육감과 전남교육감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청회는 특정 입장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 교육 의제를 균형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권철 기자



## 광주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광주시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건설현장 안전 점검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산업안전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진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3인1조의 점검반이 시·자치구 발주공사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지도·점검한다.

점검반은 비계 및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안전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신호수 배치,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주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불시 순회점검(메트릭)과 연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신호수 배치,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주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송현근 기자

전남 무안군은 4월1일 오후 2시 무안읍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실시되며, 설명회에서는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 차원 지원사업 등이 소개된다.

특히 국방부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질의 응답 시

## ‘국방부 주관’ 내달 1일 군공항 이전 무안 주민설명회 이전 절차·지원사업 등 소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간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는 지난 2월에 한차례 잠정 연기된데 이어 3월에도 20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되지 못했다. 2월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통과와 무안군이 1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등 3대 전제 조건의 이행 계획이 미

흡하다는 이유로 무안군이 국방부 측에 보완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3월에는 이전 예정 후보지역인 운남·망운면 인근 현경면 양돈농가에서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이동제한이 풀리지 않는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전민규 기자

무안군은 향후에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확인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 광주시교육청, 올해 첫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24일 실시

### 3학년 기존 수능과 동일... 1~2학년 2028년 개편 수능 적용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24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력평가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고 3학년은 현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실시하고, 고 1·2학년은 개편된 2028 수능 체제를 적용한다.

응시인원은 고 1학년 1만4000여 명, 2학년 1만3300여 명, 3학년 1만3500여 명이다.

3학년은 1교시 오전 8시40분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4교시 사회·과학 탐구영역이 오후 4시37분 종료된다.

1·2학년 1교시 시작 시간은 3학년과 동일하며 마지막 4교시 과학탐구 영역이 오후 5시10분 종료된다.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제2외국어 영역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력평가를 통해 고 1·2 학년이 새로 개편된 2028학년도 수능 체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제가 폐지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응시한다. 사회·탐구영역의 과목별 응시 문항수와 시험 시간도 20문항 30분에서 30문항 40분으로 확대된다.

3학년의 경우 이번 학력평가는 올해 수능의 경향을 가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계기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결정 및 학습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8월과 10월에 자체 모의고사를 보급하는 등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개편된 수능 체제가 적용되는 만큼 변화된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반헌법적 ‘일제 강제 노역 제3자 변제’ 국정조사 하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인 ‘3자 변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외교부·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윤 정권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제3자 변제를 추진했다”며 “채권자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

제에 강력히 반발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윤 정권은 위법적인 법원 공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은 공탁 절차를 밟고자 위조 인감 4개를 만들어 58회나 사용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 7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막도장을 찍어 날인했다”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외

교부가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단체들은 일련의 과정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 절차를 국가가 나서 방해했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외교부 차원의 사과, 3자 변제안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제3자 변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3자 변제안)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법부 판결을 무

력화한 대한민국 외교사의 수치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공탁 절차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진두지휘한 것은 외교부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조준 외교부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이라는 구실을 거두고 제3자 변제안을 당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062-525-9775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수준)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